

연구논문

교육수준이 선거기권에 미치는 영향: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을 중심으로*

Modified Rational Choice Model for the Effects of Education on Election Participation in Korea

장 원 호**

Wonho Jang

서구의 선거에서 일관성 있게 발견되는 교육과 투표율의 양의 관계가 한국에서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는 하나의 수수께끼와 같은 현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에 공약실천확률(p')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첨가하여 이 문제를 풀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이 정치가나 선거제도에 관한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약실천에 대한 불신감이 높고 결국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인구적 특성으로 기권자들을 직접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합리성 요인이라는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기권자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설명은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에 기반한 것이다.

주제어: 선거, 기권자, 합리적 선택

While people with higher education are more likely to vote in most western societies, they are less likely to vote in Korea. To explain this puzzle, this paper introduces new concept of "distrust of the public promise." With this new concept, this paper contends that in Korea where public promises are so easily broken, those with higher education are more skeptical of the politicians. Based on the various post-election surveys, this paper shows that

* 이 논문은 200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부교수 장원호.
E-mail : wjang@uos.ac.kr 이 논문을 두 번에 걸쳐 자세하게 논평해 준 심사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사자의 논평은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distrust of the public promise” leads the more educated people to abstain in the election. By adding rational factors of the voters to the conventional model, this paper proposed a more comprehensive model to explain non-voters in Korea. This paper explains increasing Korean non-voters in terms of rational choice perspective.

key words: Korean election, non-voters, rational choice

I. 머리말

투표행위(voting behavior)의 분석에서 매 선거 때마다 다루어지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다. 하나는 사람들은 왜 투표를 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였다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 후보를 선택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두 연구 주제 중 투표/기권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만약 투표자와 기권자가 아무런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투표/기권의 문제는 단순히 투표당일 개인들의 특정한 사정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권자는 투표 당일 몹시 아팠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갑자기 투표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거나 하는 등등의 사유로 투표하지 못했다고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서구의 투표행위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것은 투표자와 기권자 간에는 매우 뚜렷한 사회인구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투표자와 기권자 간의 사회인구적 차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령과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로즈와 울핑거(Rose & Wolfinger 1980)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할 능력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 지식이 증가하고 이것은 다시 정치적 관심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투표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로즈와 울핑거는 서구의 투표/기권에 대한 분석에서 교육수준이야말로 서구의 투표율을 설명하는 가장 견고한 지표라고 제시하고 있다. 연령과 투표율은 일반적으로 에스(S)자의 곡선(curve-linear)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젊은 층은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

로 사회적 이동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지식이 적어 정치적 관심도가 낮아 기권할 확률이 높은 반면, 중년층은 직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주거 상의 이동이 적어 지역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보다 많이 알고 이것은 결국 지역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므로 투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70세가 넘게 되면 투표장에 가는 것이 신체적으로 어려워져 기권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Niemi & Weisberg 1993).

위의 연령, 교육과 투표율의 관계는 서구에서는 거의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매우 재미있는 차이가 발견된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과 투표율의 관계에서는 서구와 한국이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교육과 투표율의 관계는 서구와 한국이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서도 설명하였지만, 서구의 선거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은 것은 매우 일반적인 경향인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낮은 경향이 매 선거마다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수수께끼와 같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전문직 종사자의 투표율도 서구와 한국이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문직과 교육수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투표율에서의 서구와 한국의 정반대 경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한국과 미국의 투표율과 사회인구적 특성 비교

	미 국	한 국
성별	성별 간 투표율의 차이 없음	성별 간 투표율의 차이 없음
연령	나이가 들수록 투표율이 높음	나이가 들수록 투표율이 높음
교육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낮음
직업	전문직의 투표율이 높음	전문직의 투표율이 낮음
수입	수입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음	수입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약간 높음
기타	백인일수록 투표율이 높음	도시지역의 투표율이 낮음

출처: Abramson et al. 1999.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선거자료, 1992~2002.

교육과 투표율의 관계가 서구와 한국이 정반대라는 수수께끼는 한국의 투표/기권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인데, 기존 연구에서 이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다운스(Downs 1957) 이후 발달해 온 합리적 선택론을 적용하여 기존의 사회인구적 변수만으로 투표/기권을 설명하기보다는 개인의 합리성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투표/기권과 관련된 사회인구적 변수와 합리성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할 것이다. 즉, 사회인구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합리성 변수들의 고유한 영향력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합리적 선택론이 한국의 기권자들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서구의 기권자 집단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다운스(Downs 1957) 모델에 ‘공약실천확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한 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같이 정치가가 자신의 공약을 무시하는 경향이 높은 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가의 ‘공약실천확률’을 낮게 인식하고 이것이 결국 기권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치가 및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회의 투표/기권에 대한 합리적 선택론적 설명에 새로운 이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한국의 투표/기권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시각으로는 이른바 ‘도저촌고(都低村高)’론을 들 수 있다. 윤천주는 근대화론에 입각한 정치문화적 설명을 제시하는데, 근대적 정치문화가 낮은 농촌에서는 준봉투표(conformity voting)를 하기에 투표율이 높은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관심투표(interest voting)를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다(윤천주 1989). 김종립(Kim 1980)은 동원투표(mobilized voting)로서 도저촌고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공동체 의식이 약하고 분화된 사회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보다 공동체 의식과 위계질서가 남아 있는 농촌에서 동원 압력의 채널도 많고 그 효과도 크기 때문에 도시보다 농촌의 투표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최근의 선거에서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투표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견 여전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해방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척되었기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근대화된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과 위계질서가 과연 어느 정도 투표율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운 것이다. 또한 정치의식도 과거보다는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데, 도시-농촌 간의 투표율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이 요구된다. 즉, 현재 투표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농촌 간의 투표율 차이는 근대화 정도나 정치의식의 차이가 아닌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화의 결과 도시-농촌 간의 학력이나 연령의 차이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투표율의 차이는 이러한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기권자 분석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적 시각으로는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이 있다. 다운스(Downs 1957)에 따르면 투표자는 투표할 때 기대되는 이익(B: Benefit)이 투표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C: Cost)보다 크다고 주관적(subjective rationality)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고, 기권자는 그 반대로 투표 비용이 이익을 넘어선다고 판단한다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식으로 표시하면 투표자는 $PB - C > 0$ 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고 기권자는 $PB - C \leq 0$ 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P는 유권자 개인의 한 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적 확률이고, B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자신이 얻게 되는 효용과 상대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돌아오는 효용과의 차이를 나타내며, C는 투표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이 이론의 문제는 다운스 자신이 인식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P의 가치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B의 크기에 상관없이 PB는 C보다 작게 느껴지는 것이다¹⁾. 그렇다면 합리

적인 유권자는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경험적인 투표율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이론이 되고 마는 것이다. 다운스는 이러한 패러독스에 대한 답으로 시민 의무감(civic duty)이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라이커와 오데슈(Riker & Ordeshook 1973)은 시민 의무감을 분석 모델에 추가해서 $PB - C + D$ (시민 의무감) > 0 인 사람이 투표를 한다고 주장한다²⁾.

하지만, 이 경우 가장 큰 이론적 문제점은 인간 행위에 대한 상충되는 가정이 한 모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개인의 행위 동기를 어떻게 가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합리적 선택론은 베버의 도구합리성을 가정하고 행위의 물질적, 경제적 동기를 중시하는 반면, 구조주의와 같은 이론들은 가치합리성을 가정하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과 도덕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라이커와 오데슈는 도구합리성과 가치합리성의 행위 동기를 하나의 모델에 같이 사용함으로써 현실적인 면에서는 모델의 설명력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으나, 이론적 차원에서는 모델 구성 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론을 바탕으로 한국 선거의 투표/기권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제한(1993)과 김욱(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제한은 선거가 치열할수록(P가 높을수록), 후보자 선호에 차이가 있을수록(B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욱은 주로 시민 의무감이라는 항목을 변수화하여 한국의 투표/기권을 분석하고 있다. 이 두 연구는 한국 선거에서의 투표/기권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으나, 전술한 중요한 수수께끼, 즉 서구에서는 교육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은 반면 한국에서는 교육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낮은 사실에 대

1) 예를 들어 백만 명이 투표한다면, P는 백만 분의 일이라는 매우 작은 값이 되는 것이다.

2) 물론 라이커와 오데슈에게 D의 개념은 단순한 시민의무를 넘어서 투표행위가 가져오는 다양한 내재적 만족감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 의무를 수행했다는 만족감이 D의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하겠다.

해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선거에서의 기권자 특성을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론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적용하는 모델로는 라이커와 오데슈의 시민 의무감이 포함된 모델이 아닌 다운스의 기본 모델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다운스의 기본 모델은 전술한 대로 도구합리성만을 가정하였을 때 $(PB-C)$ 가 항상 0보다 작다는 패러독스가 발생한다. 여기서 행위 이론과 그 이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행위의 동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떠한 행위 이론이라 할지라도 행위의 동기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예를 들어 도구합리성을 전제했을 때, 다른 전제의 이론보다 행위의 동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PB-C > 0$ 일 때 투표한다는 다운스의 엄격한 모델보다는, 투표할 확률은 P , B , 그리고 C 의 세 요인에 따라 변한다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P(V) = f(P, B, C)$ 로 모델을 변형하고자 한다. 여기서 $P(V)$ 는 투표할 확률이고 B , P , 그리고 C 는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자신이 선호하고 싫어하는 후보자가 뚜렷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을 높게 인식하게 되고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B 와 관련된 예측). 또한, 선거가 접전일수록 한 표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고 이것은 투표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P 와 관련된 예측).

이러한 기본적인 예측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권자 집단을 설명할 때 항상 제기되는 수수께끼, 즉, 서구에서는 교육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는데 한국에서는 그 반대의 관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운스 모델의 세 가지 요인 외에 하나의 요인을 더 추가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다운스의 기초 모델로 돌아가 보면, 투표자는 PB 가 C 보다 클 때 투표하게 된다($\text{Vote, when } PB-C > 0$). 그런데, B 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후보자 또는 제도를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다운스의 B 는 정치가가 제시하는 정책이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

일 어느 유권자가 선거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이 소위 ‘빈 약속(空約)’으로 끝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B는 대단히 작은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즉 다운스의 B자체도 $B \times p'$ (p' 은 해당 정치가가 공약을 실현할 주관적 확률)로 다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P(V) = f(P, B, p', C)$ 의 모델을 제시한다. 여기서 p' 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나라일수록 1에 가깝게 되고 정치적인 변동이 많고 체도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작아지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할 때, 한국의 교육과 투표율의 역관계가 해석될 수 있다. 즉, 한국과 같이 정치가들이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 수집과 처리에 드는 거래비용이 적기 때문에 p' 을 낮게 인식하게 되고 결국 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권자들을 설명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론의 적용 외에도 p' 요인과 투표확률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자료

1. 가설 및 분석방법

전술한 대로 이 연구의 투표/기권 모델은 다음과 같다.

$$P(V) = f(P, B, p',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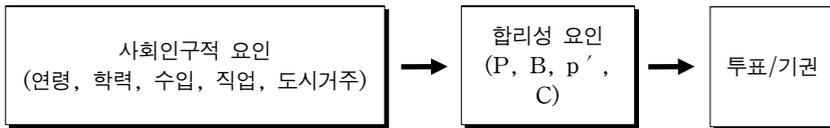
$$P(V) = \text{투표할 확률}$$

P = 유권자 개인 한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적 확률

B =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자신이 얻게 되는

효용과 상대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돌아오는 효용과의 차이
 p' = 당선된 후보자가 공약을 지키리라 예상하는 주관적 확률
 C = 선거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

그리고 기존의 사회인구적 변수와 투표/기권 간에 나타났던 상관관계는, 사회인구적 변수와 투표/기권 간의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합리성 요인(P, B, p', C)의 매개에 의한 간접적 인과관계로 파악한다. <그림 1>은 이것을 도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림 1> 투표/기권의 합리성 요인과 사회인구적 요인

위의 모델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한국 선거의 투표/기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설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가설들은 <그림 1>의 합리성 요인과 투표/기권 간의 관계에 관한 것과 사회인구적 요인과 합리성 요인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합리성 요인과 기권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가설 1> 후보자의 공약실천에 대한 불신이 큰 유권자일수록 기권할 확률이 높다.

이 가설은 이 연구의 중심이 되는 개념인 ‘공약실천확률(p)’과 기권할 확률에 대한 예측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선거에서 공약이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에 유권자의 불신감은 커지게 되었다. 선거공약(公約) 실천에 대한 불신은 결국 선거를 통해 자신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결국 기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가설 2> 유권자가 투표를 합리적으로 파악할수록 기권할 확률이 높다.

이것은 다운스 모델의 주요 가설이다. 투표를 시민의 의무라고 하는 규범적인 생각보다는 투표를 하여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는 사람이 기권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한 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한 표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투표하기보다는 기권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2)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합리성 요인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

<가설 3>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적 직업에 종사할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후보자의 공약실현 가능성(p')을 낮게 평가한다.

이 가설은 위의 집단이 정치적 정보를 습득할 능력이 높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한국 선거에서 정치적 정보를 보다 많이 알게 될수록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거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정치적 정보수집과 처리에 드는 거래비용이 적기 때문에 정치적 정보를 보다 많이 습득하게 된다. 더욱이 '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위의 집단들은 타 집단보다 인터넷 사용이 활발하고 따라서 정치적 정보에 대한 접근도 보다 쉬어졌다.

<가설 4>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도시거주자일수록 투표를 합리적으로 파악한다.

이 가설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합리적 계산이 젊은 층이나 도시 거주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근대화되는 시기를 '70년대 이후라 생각할 때, 기성세대들은 전근대적 시기에 사회화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잉글하트가 주장하듯이 한 사람의 가치관은 사회화 시기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투표에 대하여 규범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젊은 세대는 투표를 합리적인 계산으로 파악하게 되고 그럴 경우 자신의 한 표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쉽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에 거주할수록 산업사회의 계산적 합리성에 익숙해 있으므로 투표를 보다 계산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예측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가설을 바탕으로 <그림 1>에서 제시된 사회인구적 변수와 합리성 변수가 투표/기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사회인구적 변수로서 직접 투표/기권을 설명했던 종전의 연구와는 달리 합리적 변수의 매개성을 살펴볼 것이다.

분석의 대략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사회인구적 요인과 투표/기권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합리성 요인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회인구적 변수와 합리성 변수를 하나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이 경우, 합리성 변수의 영향력이 사회인구적 변수의 영향력을 흡수하는 것이 예측된다. 또한, 위의 분석만으로는 <그림 1>의 경로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사회인구적 요인이 합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합리성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인구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사회인구적 변수와 합리성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해야 할 것은, 이 연구가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기권에 대한 분석보다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투표기권의 분석을 바탕으로 위의 가설을 입증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87년 이후 지금까지의 대통령 선거가 지역주의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투표 후보뿐만 아니라 투표/기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蘇淳昌 1997, 조기숙 2000, 최영진 1999). 물론, 지역주의에 입각한 투표에서도 자신의 지역에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과 같은 합리적 요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주의 투표가 지역감정에 바탕하고 있고 이것을 합리적 요인과

구별하기는 기존 자료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의 기권자 분석은 향후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자료 및 변수측정

1) 연구자료

이 연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선거후 조사(post-election survey)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는 1992년 대통령 선거 이후 모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후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로는 2000년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후 조사를 사용하였다. 두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연구자료에 대한 설명

	2000년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후 조사	2002년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후 조사
조사대상	만 20세 이상 남·여 유권자	만 20세 이상 남·여 유권자
조사지역	전국(제주도 제외)	전국(제주도 제외)
유효표본	1,100명	1,501명
조사방법	대인면접조사	대인면접조사
표집방법	다단계 층화 표집	다단계 할당 표집
조사기간	2000. 5. 12 - 2000. 5. 23	2002. 6. 14 - 2002. 6. 23
조사기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 주요변수 설명

본 연구의 주된 변수는 공약실천불신을 측정하는 것과 합리적 계산을 측정하는 것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약실천불신’ 변수는 ‘정치인은 당선 후 선거 때와는 다른 행동을 함’이라는 문항을 이용하였고 ‘합리적 계산’ 변수는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이 하기에 자신의 투표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두 변수 모두 5점 척도로서 정규분포에 근접한 분포를 가지고 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라는 점에서 등간 변수로 간주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와 함께 정치문화에 입각한 기존의 '도저촌고론'과 합리적 선택론적 설명을 비교하기 위하여 '정치적 미성숙' 변수를 분석 모델에 포함하였다. 기존의 정치문화 이론은 정치적 미성숙이 높을수록 준봉투표를 함으로써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위에서 제시된 모델에 의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성숙할수록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미성숙'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여 정치문화이론과 합리적 선택론 중 어느 이론이 한국 선거에 보다 설명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정치적 미성숙 변수는 '정치나 정부 일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항목과 '나 같은 사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두 가지의 5점 척도 항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IV. 한국 선거의 투표/기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과학 데이터센터의 200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지방선거 자료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수는 '투표기권'이고 독립변수는 합리성 변수와 정치적 미성숙 변수, 그리고 사회인구적 변수를 포함하였다. 모든 회귀계수는 기권의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기에 양의 계수가 의미하는 것은 그 변수의 속성이 증가할수록 기권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음의 계수는 그 변수의 속성이 증가할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p' 을 지지해 줄 '공약실천불신'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미성숙' 변수도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00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기권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 수		회귀계수	발트(Wald)	유의확률
성별 (여성 대비 남성)		.042	.071	.790
연령		-.067	54.241	.000
교육 (중졸 이하 대비)	대재 이상	-.320	1.009	.315
	고졸	-.497	3.385	.066
수입		.042	.975	.323
거주지 (군지역 대비)	대도시	.512	5.191	.023
	중소도시	.455	3.447	.063
직업 (기타 대비)	전문사무직	-.402	2.875	.090
	학생	-.178	.325	.569
정치적 미성숙		.057	1.761	.184
합리적 계산		.504	47.407	.000
공약실천불신		.074	.776	.378
유효 표본수: 1100				
카이제곱(Chi-Square): 192.6 (유의확률: $p < 0.0001$)				

자료: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0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후 조사

다. 하지만, ‘합리적 계산’은 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자신의 한 표의 영향력을 합리적으로 계산할수록 기권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사회인구적 변수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연령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기권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는 기존의 사회인구적 설명을 지지하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본 연구가 합리성 요인을 충분히 분석모델에 포함하지 못한 데에 기인할 수도 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투표일이 공휴일인 시스템에서는 선거일에 다른 여가활동의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여가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투표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나이가 많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젊은 층의 투표확률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김욱 1998). 위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기회비용의 차이에 관한 변수가 없었기에 연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도 해석될 수도 있다.

기권율의 관계와 관련하여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도시에 거주할수록 기권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도저촌고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기회비용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기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도시거주자일수록 휴일에 장거리 여행 등의 여가활동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표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표 3〉에서 재미있는 결과는 합리성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교육과 전문직의 기권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전술한 대로 이변량 분석에서는 교육과 전문직 모두 기권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왔는데, 합리성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비록 약하지만 서구와 마찬가지로 투표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큰데, 서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교육 자체는 투표율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후보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기권할 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성 요인에 의해 그 관계가 음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에서의 기권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회의원 선거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2002년 지방선거의 선거 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투표기권’을 종속변수로 하고 합리성 변수, 정치적 미성숙 변수, 사회인구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도 모든 회귀계수는 기권의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기에 양의 계수가 의미하는 것은 그 변수의 속성이 증가할수록 기권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음의 계수는 그 변수의 속성이 증가할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의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본 연구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개념인 p' 을 측정하는 ‘공약실천불신’ 변수가 투표기권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선거 후에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적다고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설 2〉에서 제시되는 ‘합리

적 계산' 변수는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 거주여부가 기권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것은 '도저촌고론'을 지지하는 결과일 수도 있고 합리적 선택론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사회인구적 변수에서 '연령'은 여전히 투표기권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나이가 젊을수록 기권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도 위에서 제시한 대로 기존의 사회인구적 설명과 합리적 선택론적 설명 두 가지가 가능하다. 또한 '정치적 미성숙' 변수의 의미 있는 영향력은 기존의 정치문화론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낮은 정치문화를 지닌 사람일수록 준봉투표나 동원투표로 인해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아직도 준봉투표나 동원투표의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이 합리성 변수를 통제할 상태에서는 투표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위에서 설명한 대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 2002년 지방선거 투표/기권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 수	회귀계수	발트(Wald)	유의확률
성별 (여성 대비 남성)	-.042	.086	.769
연령	-.073	79.557	.000
교육 (중졸 이하 대비)	대재 이상	5.837	.016
	고졸	4.386	.036
수입	.001	3.300	.069
거주지 (군지역 대비)	대도시	26.444	.000
	중소도시	24.088	.000
직업 (기타 대비)	전문사무직	.389	.533
	학생	.355	.551
정치적 미성숙	-.084	5.409	.020
합리적 계산	.454	57.388	.000
공약실천불신	.161	3.904	.048
유효 표본수: 1270			
카이제곱(Chi-Square): 252.6 (유의확률: $p < 0.0001$)			

자료: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2년 지방선거 선거후 조사

이제 <가설 3>과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인구적 변수와 합리성 요인의 관계를 분석해 보겠다. 이것은 전술한 대로 사회인구적 변수와 투표/기권의 상관관계가 주로 합리성 변수의 매개에 의한 간접적 인과관계라는 가정에서, 사회인구적 변수와 합리성 변수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약실천불신’과 ‘합리적 계산’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인구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가설 3>의 주장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후보자의 공약실현 가능성(p')을 낮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가설 4>에서 제시되었듯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합리적 계산’이 높은지를 검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사회인구적 변수와 합리성 변수의 관계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준화 회귀계수)

변수		2000년 국회의원 선거		2002년 지방선거	
		공약실천불신	합리적 계산	공약실천불신	합리적 계산
성	별	-.012	-.011	-.006	.019
연	령	.039	-.031	-.256**	.097
교	육	.113 ^a	.333**	.138	.053
수	입	-.058	-.081*	.055	-.021
도시거주 ¹⁾		-.028	.136**	.003	-.019
직업	전문직	.029	-.004	-.002	-.008
	학생	-.046	-.022	-.058	.064 ^a
나이·학력		.019	-.389**	-.128	-.159
결정계수		.006	.041**	.021**	.020**
유효 표본수		1100	1100	1276	1275

자료: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2년 국회의원 선거 및 2002년 지방선거 선거후 조사

*: $p < .05$, **: $p < .01$, (a: $p < 0.1$)

주1) 거주지 변수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묶어서 2분변수로 처리하였음.

<표 5>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낮은 결정계수가 보여주듯이 모델의 설명력이 적다는 사실이다.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실천불신’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은 아예 모델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합리성 요인을 파악하는 ‘합리적 계산’과 ‘공약실천불신’의 두 변수가 합리성 요인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을 인정하고 분석결과를 보면, 상당 부분 <가설 3>과 <가설 4>의 예측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00년 국회의원 선거를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공약실천불신’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약의 실천을 의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합리적 계산’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에서는 대부분이 <가설 4>의 예측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합리적 계산의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의 직접적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지만 연령과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기권할 확률이 크게 높다고 할 수 있다³⁾. 가설에서 예측하지 않았던 한 가지 결과로는 수입이 높을수록 합리적 계산이 낮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입이 높을수록 자신의 한 표의 가치를 크게 인식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수입이 높을수록 후보자의 정책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의 차이에 민감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한 표의 가치를 크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02년 지방선거를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공약실천을 불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교육이나 직업의 영향은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합리적 계산’과 사회인구적 변수의 관계에서는 직업 변수의

3) 여기서는 교육을 ‘대개 이상’과 ‘고졸 이하’의 이분변수로 처리하였다. 그 이유는 교육과 연령의 상관관계가 -0.683 로 매우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만이 의미 있는 영향을 보이고 있다.

V. 한국 선거에서의 기권자 증가와 합리성 요인

한국의 투표/기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기권율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권율 증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제시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합리적 선택론적 입장에서는 공약실천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권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권율 증가를 가져온 주된 집단으로는 정치제도와 정치가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집단을 들 수 있다. 즉, 위에서도 제시하였지만, 먼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많은 정치정보를 낮은 비용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고급정보를 소유할 자원이 많다는 점에서, 도시에 거주할수록 다양한 네트워크 속의 사회적 교류를 통하여 더 많은 정치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들이 기성세대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의 기권율 증가가 다른 집단보다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표 4>를 보자. 먼저 1992년~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율의 평균 감소율은 11.4 %인데 이것을 넘게 감소한 집단의 사회인구적 특성을 보면,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도시화 정도별로는 대도시 거주자와 중소도시 거주자, 교육수준으로는 대재 이상, 생활수준은 중류와 상류, 그리고 직업으로는 학생과 생산직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생산직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이 연구가 예측하고 있는 방향과 모두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선거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기권율 증가는 16.2%인데, 이를 상회하는 집단으로는 남성, 20대와 30대, 대도시 거주자, 대재

이상 학력자, 생활수준 중간 이상자, 전문직과 학생임을 알 수 있다.

〈 표 5 〉 사회인구적 변수와 기권을 변화: 1992~2002 (단위: %)

유형별		연 도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1992	2000	차이	1995	2002	차이
성별	남		12.4	25.7	13.3	10.9	28.6	17.7
	여		15.6	24.8	9.2	14.0	28.8	14.8
연령별	20대		24.1	45.3	21.2	22.5	52.9	30.4
	30대		15.8	27.6	11.8	12.7	33.1	20.4
	40대		6.6	14.7	8.1	5.3	20.6	15.3
	50대 이상		7.8	12.5	4.7	5.0	10.5	5.5
조사 지 규모	대도시		17.1	28.8	11.7	13.0	33.0	20
	중소도시		12.3	26.1	13.8	16.8	31.5	14.7
	군지역		9.2	15.9	6.7	6.8	15.8	9
교육 정도	중졸 이하		9.4	14.4	5.0	8.8	14.4	5.6
	고졸 이하		18.1	25.9	7.8	11.4	27.2	15.8
	대재 이상		14.5	33.1	18.6	17.7	37.8	20.1
생활 수준	상		13.0	25.5	12.5	15.3	29.9	14.6
	중		13.5	27.4	13.9	11.9	31.0	19.1
	하		15.7	18.3	2.6	11.5	21.7	10.2
직 업 유 형	전문관리직		16.7	26.4	9.7	6.1	30.1	24
	사무직		18.4	23.6	5.2	19.2	28.8	9.6
	판매서비스		17.4	26.8	9.4	12.5	24.4	11.9
	농어민		2.1	6.3	4.2	2.1	9.3	7.2
	생산직		17.5	31.4	13.9	21.8	30.7	8.9
	주부		11.7	20.8	9.1	7.8	24.4	16.6
	학생		13.2	49.4	36.2	21.4	54.2	32.8
	기타		16.1	20.4	4.3	16.1	17.6	1.5
합 계			13.9	25.3	11.4	12.5	28.7	16.2

자료: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선거후 조사 (1992-2002)

VI. 맺는말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의미 있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합리적 선택론에 입각한 변수로서 투표/기권을 다변량 분석함으로써, ‘도저촌고론’이나 사회인구적 변수만으로 투표/기권을 설명했던 기존의 연구를 넘어서 좀 더 종합적인 분석을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사회인구적 변수가 합리성 요인의 매개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것을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투표/기권과 관련된 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구에서 일관성 있게 발견되는 교육과 투표율의 양의 관계가 한국에서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에 이른바 공약실천확률(p')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공약실천확률이 기권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투표/기권을 설명하는 데에 공약실천확률(p')의 활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90년대 이후 급속히 감소하는 투표율에 대하여도 합리적 선택론적 시각, 특히 공약실천확률(p')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90년대 이후의 급속한 기권율 증가는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훨씬 급격한 기권을 증가를 보였기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한국의 정치제도와 정치가의 문제를 보다 많이 알고, 따라서 공약의 실천(p')을 의심하는 교육수준이 높은 층, 소득수준이 높은 층, 도시거주자, 그리고 저 연령층 집단이라는 사실을 경험적 자료로서 검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대통령 선거가 투표/기권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대통령 선거의 투표/기권이 지역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와는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제시한 공약실천확률(p')이

라는 개념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각 선거에 따른 공약실천확률(p')의 영향력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 아쉬운 것은 이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선거후 조사자료만으로는 사용가능한 항목의 제한으로 '합리적 계산'이나 '공약실천불신'과 같은 합리성 변수를 척도화하여 측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 점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공약실천불신' 변수의 영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합리성 요인을 좀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의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공약실천확률(p') 개념을 검증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하겠다.

참고문헌

- 김 욱. 1998. “투표참여와 기권”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II: 제 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푸른길.
- 김재한. 1993. “투표참여의 합목적성: 14대 대선에서의 기권행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 정치》 9(1): 89-100.
- 이남영. 1993. “투표 참여와 기권: 제 14 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나남.
- 윤천주. 1989. 《투표참여와 정치발전: 속 우리나라의 선거실태 증보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기숙. 1996.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한울 아카데미.
- 조기숙. 2000.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나남출판.
- 최영진. 1999. 《한국 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도서출판 오름.
- Abramson, Paul R., John H. Aldrich and David W. Rohde. 1999.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1996 and 1998 Elections*. Washinton DC: CQ Pres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 Ferejohn John A. and Morris P. Fiorina. 1974. "The Paradox of Not Voting: A Decision Theoretic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525-536.
- Flanigan William H. and Nancy Zingale. 1998. *Political Behavior of the American Electorate*. Washington: CQ Press.
- Kim, Chong-Lim. 1980.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Democracy, Mobilization, and Stability*. Santa Barbara: Clio Books
- Miller, Warren E. and J. Merrill Shanks. 1996. *The New American Vo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iemi, Richard G. and Herbert F. Weisberg. 1993. *Controversies in Voting Behavior*. Washington: CQ press.
- Riker, William and Peter Ordeshook. 1973.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olitical Theor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蒲島郁夫.1992. 《政治參加》東京大學出版會.
- 蘇淳昌, 1997. "韓國地方選の地域主義と政黨支持" 《選舉研究》12: 231 ~ 47.